

“조였다 풀었다” 은행들 왜 이러나...가계대출 1000조원 시대

대출 문턱 높아진다

은행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사상 처음 1000조원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대출을 고민하는 고객들은 잇따르는 정부 규제와 자주 바뀌는 은행 정책에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연초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개별 은행 현황을 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6월부터 개인신용대출의 최고 한도를 기존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낮췄다. 지난달에는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상품 판매도 일시 중단했다. 또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 낮춘 바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 30일부터 관리비 대출, 솔져론, 하나원큐 중금리대출, 하나원큐 사이트 대출 등 4종의 신용대출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5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축소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부터 3000만원 초과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연장·

은행 가계대출 사상 첫 1000조 시대
총량 관리 압박에 수시로 대응 나서
우대금리·한도 축소...신규 일시 중단
인행은 중금리 늘리려 고신용대출 ↓

재약정 시 약정 기간의 한도 사용률 혹은 만기 3개월 전 한도 사용률이 모두 10% 미만일 경우, 최대 20% 한도를 감액했다.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폭증으로 고강도 대출 조이기를 강행한 데 이어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같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각 은행은 대출 억제 방안을 내놨다가 한도 여유가 생기면 완화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그 결과 상승 곡선은 완만해진 상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9조1073억원으로 한 달 전 687조8076억원보다 1조2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5월 4년3개월 만에 처음 감소한 데 이어 진정세에 접어들어 모험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빚을 갚을 능력 대비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

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불요불급한 가계대출 취급을 최소화해달라”며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취급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은행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소비자금융 매각 변수가 생긴 씨티은행은 고객들 빠져나가지 않게 일부 대출 금리를 인하하거나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3%대고, 평균 금리는 4%대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이 취급한 신용대출 최저 금리가 2% 중후반이고, 평균 금리가 2% 후반~3% 초반인 것과 비교하면 소폭 높은 수준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올해 중금리대출, 중저신용대출을 확대하고 고신용



자 대상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카카오펙크의 경우 지난 5월 중저신용 고객 대상 금리는 최대 1.2%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한도를 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한 반면 고신용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는 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줄여들었다.

그러자 대출 연장 시점에 이자 부담이 늘어난 걸 체감한 기존 대출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사실 인터넷은행은 올해 겨자먹기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포용금융을 염두에 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 쏠림 현상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자 시중은행들은 이달 중으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는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폭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상품으로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 유리한 게 특징이다.

앞서 2년 전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은행들과 함께 금리인상 리스크를 줄여주는 주택대출 선보였지만 금리 예측이 엇나가면서 흥행에 참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상품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이 2%포인트 이내로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엔 나올 새로운 상품은 금리 상승폭을 줄이고 이율 대상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로 대출을 받거나 갚아달 필요 없이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한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예상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산 준비 중에 있으며 아직 출시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치금융 때문에 금융권에서 상식으로 통하던 것들이 들어간 게 적지 않다”며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금융소비자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빛 많은 2030 속수무책...허리 휨다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최근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 가량인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에서 20~30대를 대상으로 실행된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25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조7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82조8000억원, 신

용대출등이 76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각 31조7000억원, 12조9000억원 불어났다.

총 가계대출 증가분 중 MZ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9년 33.7%에서 지난해 45.5%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는 50.7%로 절반을 상회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패닉바임 자금 수요에다 주식가격 상승, 코인투자 열풍 등으로 인한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 마련) 결과라는 게 김 의원 판단이다. 김 의원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MZ세대가 빚투, 영끌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어 걱정된다”며 “금융당국은 이들의 부채 관리, 부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연구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진단이 나오고 있다. 백종호 하나금융경

가계대출 증가분 절반 MZ세대
부동산 패닉바임·빚투·영끌 결과
전문가 “고정금리·장기분할 유도”

영연구소 연구위원이 작성한 ‘코로나 이후 청년층 부채 현황과 시사점’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타 연령층 대비 청년층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위험자산 투자 열풍이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백 연구위원은 “반면 악화된 고용 상황과 소득감소로 인해 취약 청년층은 금융접근에서 소외되고 다중채무, 불법대출 등 채무여건 악화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취약 청년층 지원과 투기 차단의 상반되는 목표를 분리해 대처하고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와 병행해 청년층 전용 금융상품 지원 등으로 청년층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버블이 무서운 건 끝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고 누구도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 못한다”며 “젊은 층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이제 조금씩 레버리지를 자제하는 게 좋다.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쓸 시점은 왔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초부터 시중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며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이들은 금리 전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이고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정도 오른다고 해서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생활 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입을 모은다. 대출고객(차주)들이 빚을 갚을 수 있게 대출 유형을 변화시키는 논의와 함께 그럼에도 부실화되는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안

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과 만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으로 바꿔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재 변동금리 소림 현상이 있는 상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 593조6000억원 중 변동금리 비중은 68.1%에 이른다. 2030 차주의 변동금리 비중은 69.3%로 특히 20대는 변동금리 비중이 72.6%에 달한다.

둘째, 거품이 꺼지고 하우스푸어가

대거 등장해서 채무조정이 필요한 단계까지 갔을 때 어떻게 할 지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주택담보를 보유한 차주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때 주택담보를 어느 정도 청산하면서 동시에 주택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내놓은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세일 앤 리스백)’ 제도가 어떻게 시행 중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부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자치적인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